

2020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3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5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의 주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를 [나]~[다]를 활용하여 기술하고, 그 주장의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라]~[마]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바]~[사]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정치권력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동의와 합의는 문자와 문서로 형식화된 법으로 규정된다. 정치는 권력의 내용이고, 법은 권력의 형식이다. 즉 정치가 인간의 권력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법은 권력적 상호 작용의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법에 근거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된다.

김왕근 외, <고등학교 법과 정치>

[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상호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보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로크, <통치론>

[다] 플라톤이 정의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 위에 세운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상호성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호성이란 비슷한 것끼리의 교환, 가치가 동등한 것끼리의 교환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분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라고 보는 상호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례를 고려한 상호성을 주장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동등하다면 그들의 몫이 같아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산술적 평등만으로는 고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사자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분배를 해야 공정하다고 합니다.

김영란, <열린 법 이야기>

[라] 하세가와 데루는 일본의 야마나시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으나, 일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며 반침략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중국인 유학생 류런을 만나 결혼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국민 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중국 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였다. 유창한 일본어로 계속되는 반일 방송은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당시 도쿄의 신문에서는 그녀를 '달콤한 목소리의 매국노'라고 비난하였고, 하세가와의 가족은 목숨을 위협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안병우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마]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제한받을 수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이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바]

일자	주요 내용
제6차 개헌 (1969. 10. 21)	· 대통령 3선 허용
제7차 개헌 (1972. 12. 27)	· 대통령 임기 6년 · 대통령 긴급조치권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 헌법위원회 설치
제8차 개헌 (1980. 10. 27)	·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 · 대통령 임기 7년
제9차 개헌 (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임기 5년 · 헌법재판소 부활

차별적 외, <지금 다시, 헌법>

[사]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또한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 놓아 아들 선호를 조장하였다.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性)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 가족법에 있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과 1977년·1990년·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근대 국가와 권력의 존립 기반으로서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의미와 전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법치주의 실행에서 당면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어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교과서를 포함한 복수의 텍스트로부터 주요 주장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관련 자료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문항해설

본 문항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학습하는 법치주의의 의미와 근거, 실행상 한계와 해결방안을 통합적 제시문을 통해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평가 목표로 삼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법치의 형식적 요소인 구성원간의 합의와 동의에 따른 사회계약설을 제시하고 있고,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서는 법치의 내용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법의 목적 = 정의의 개념이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온 하세가와 데루의 사례는 국가권력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법을 사용할 경우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법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6차~9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다룬 표와 호주제 폐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치주의의 실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 문제를 시대와 사회적 조건, 시민의 합의 등을 통해 법을 끊임없이 개정해 나가며 해결하려는 시도를 도출할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제시문을 바탕으로 [가]의 주요 주장을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가?
- [나]와 [다] 제시문에 나타난 법치주의의 형식적, 내용적 전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라]와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실행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바]와 [사] 제시문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실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1000자 이내 서술하였는가?

4. 예시답안

[가]에서는 국가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모든 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라는 형식적 측면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나]에서 보듯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법이 필요하고, 이는 인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법치의 형식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정의는 당시 분배의 규칙이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법의 시행이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정치권력이 개인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치주의로 실행된다고 해도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이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먼저 하세가와의 경우 제국주의 일본이 행사하는 권력이 법을 준수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고 국가보다 개인으로서 '시민'됨을 선택하여 행동한 경우이다. 또한 개인의 종교나 신념 문제와 같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할 때 개인은 그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가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 법률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에서도 보이듯 정치권력의 행사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그에 따른 법치를 주장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해 나갔다. 호주제의 문제점과 존속에 대한 찬반 논란은 시민의 연대와 시민운동으로 점진적 개정과 폐지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을 고정적, 절대적으로 보기보다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비추어 변경하고 조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